광주, 자율형공립고 시대 마감

광주일고·광주고·상일여고 학생 우선 선발권 폐지
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일하게 진학 희망학교 선택

내년부터 광주지역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사실상 자공고 시대가 마감된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23학년도 광주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자공고(광주일고·광주고·상일여고)의학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진학 희망학교로 이들 자공고를 선택할 수 있다. 종전에는 선지원과 후지원 모두 선택이 가능한 '일반고'와 달리 '자공고'는 선지원에서만 선택이 가능했다.

자공고의 핵심인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는 사실상 일반고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공고에 근무했던 한 교사는 "학생 우선 선발권이 없는 자공고는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일반고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애초 자공고는 2009년에 도입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맞서 공립고교에서도 우수 학생들을 길러내자는 대응 논리로 도입됐다. 자사고는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으로 대거 확대했다. 자공고는 학사운영과 교과 운영, 교사 활동 등에서 일반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된다. 우수 교사 영입도 가능했다.

한때 자공고가 인기를 끌면서 상일여고의 경우 우수학생이 몰려 신입생 경쟁률이 5대 1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 연속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상일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 자사고와 자공고는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교육감 체제에서 폐지되거나 위축됐다. 자사고 폐지를 축으로 한 고교서열화 폐지 등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인문계 고교가 평준화됐음에도 학생들을 줄세우는 차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였다.

지난 2009년 자사고로 전환했던 송원고가 2020년 일반고로 복귀했고 보문고와 숭덕고도 2010년에 자사고로 전환했다가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지정 취소돼 일반고로 변경했다.

이번에 시교육청의 자공고 우선 선발권 폐지는 정부 방침에 앞서 선조치에 해당한다. 정부는 2025년 자공고 폐지 방침을 세웠다.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자공고 등의 존폐 여부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윤 당선인 취임 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할 수 있도록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최근 결정했다. 윤 당선인은 그간 자사고 등의 존치를 직접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공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 폐지는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 전형을 단순화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자공고 폐지 방침을 정한데다 이미 자공고도 일반고과 다름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돕는다

광역시 첫 경영안정 긴급 예비비 10억 투입

광주시가 월동기간 '꿀벌 실종'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양봉 농가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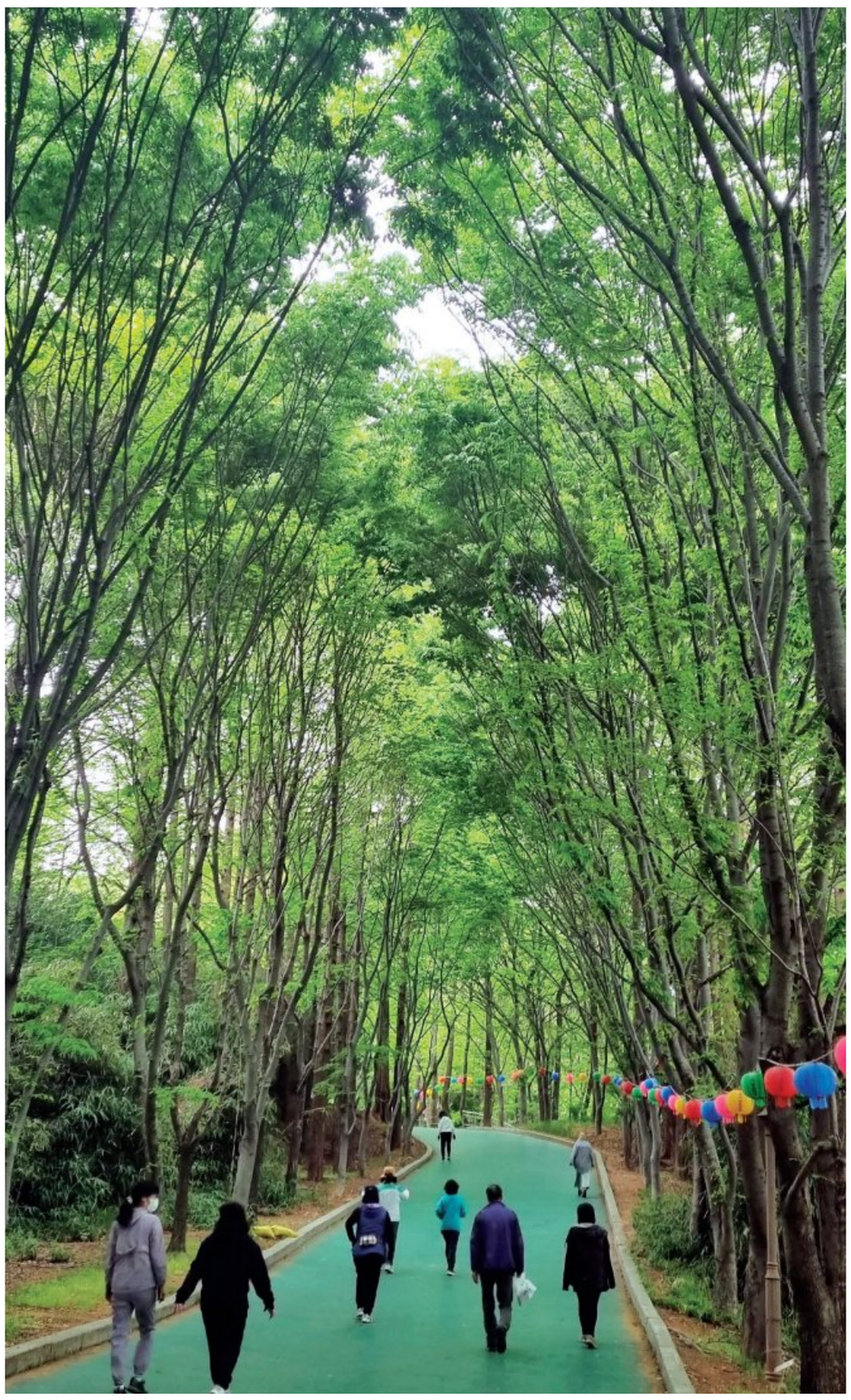
광주시는 "월동 기간 꿀벌이 사라져 피해를 본 양봉 농가의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 광역시 최초로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기후와 꿀벌 응애류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으며, 특히 봄이 일찍 오는 남부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30개 집단(군) 이상 양봉 농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역 양봉 농가의 80% 정도인 112곳에서 7300여 군, 21억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광주시는 일단 구비 포함 10억원을 입식비, 사료 구매 자금으로 투입해 농가를 돕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예비비 지원에 앞서 양봉산업육성사업 지침을 변경해 벌 입식비 지원을 추가하고, 꿀벌 응애류 등 예방약품 3종 1억6200만원, 긴급 소독약품 1600만원, 꿀벌 사육 기자재 3억 3600만원을 투입했다.

또 양봉농가 전화 예찰 및 질병검사 서비스를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도심 속 초록숲 21일 녹음이 우거진 광주시 서구 5·18자유공원 산책길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수소충전소 3곳 늘어…연내 14곳 더 확충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광주·전남에 5월까지 3개의 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확충한다. 이에 따라 지역내 수소 충전소는 총 12곳(광주 8곳, 전남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양시 성황동에 '광양성황 수소충전소'(충전용량 25kg/hr)가 22일 준공과 함께 영업에 들어간다. 시간당 최대 5대의 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다.

또 27일 완성검사가 완료되면 5월초 함평천지휴게소(목포방향)에도 승용차 전용 충전소(충전용량 25kg/hr)가 마련돼 상업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광주시 북구 장등동 공영버스차고지에는 '광주장등 충전소'(버스전용·충전용량 120kg/hr)가 완공돼 하루 최대 50대의 버스의 수소 충전이 가능해졌다.

지난 3월 말 기준 광주·전남에는 총 1359대의 수소차가 운행중이다. 영산강환경청은 올해 안으로 수소차 2671대(승용 2650대, 버스 21대)를 더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해 올해 안으로 광주 2곳, 전남 12곳 등 14곳을 더 확충하겠다는 것이 영산강환경청의 계획이다. 내년에는 광주 2곳과 전남 3곳을 추가해 광주와 전남지역 주요 도시간 연계를 높여 수소차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광양보건대 폐교해야"

교수협, 법인 파산 신청

광양보건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 교수노동조합 광양보건대학지회는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서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교수협의회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남학원 법인 파산과 광양보건대학교 폐교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1994년 설립된 광양보건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2013년 교육부 감사 후 비리대학으로 행·재정 제재를 받고 있다"며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두 차례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돼 이중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교직원들은 4년간 체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체불금액과 지연이자의 합계 금액만 108억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유신 독재 맞선 한승헌 '1세대 인권변호사' 별세

군사정권 시절 수많은 양심수와 시국 사범을 변호했던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사진〉 변호사가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한 뒤 법무관을 거쳐 1960년 법무부·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민청학련', '동백림 간첩단' 사건과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을 변론하는 등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꼽힌다.

고인은 또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낸 뒤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통합정부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2022 국제티&티푸드 박람회
Korea International Tea & Tea Food EXPO 2022
2022.06.23.[목] ~ 06.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_ (주)티엑스포
주관_ (주)한국전시애드
후원_ 국제티&티푸드박람회 추진위원회, (사)아시아차문화연구회, 차와문화
2022 국제티&티푸드 박람회 사무국(사무국장 정효수)
Hp. 010-3320-3845 Tel. 062)974-9103 Fax. 062)974-0914 E-mail : koreataf@naver.com